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한국ODA발전을 위한 제언



<왼쪽부터 박근혜, 문재인, 출처 각 대선후보 홈페이지>

지난 11월 12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는 "제18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가 공동 주관한 본 행사에는 대선 후보 유력 주자들의 선거 캠프에서 관련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국제개발협력 공약과 정책에 관한 발표를 했다. 본 토론회를 맞아 KoFID와 KCOC는 미리 대선 캠프에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문 및 질의서"를 전송했으며 이날의 토론회는 제안문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개발협력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늘어가고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및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 국제 개발협력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분석하고 KoFID의 입장에서 제안함으로써 한국 ODA 정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차기 정부를 꾸릴 인수위원회에 한국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ODA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차기 정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 국제적 기준은 준수, 국내적 실행은 미지수

KoFID는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한국 ODA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분야 10대 정책과제 및 과제별 질의사항”을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발송했다. KoFID의 정책위원단체인 ODA Watch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본 문서에는 원조기관 통합,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 정보 공개와 투명성 제고,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정책과제와 관련 질의를 담았다. 특히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에 공약한 ODA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대선 후보 측의 답변을 구하고 있다.

두 후보의 서면 답변문과 현장 토론에서 오간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요점을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원조분절화 개선 입장은 같으나 유무상 및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서는 이견 드러내

우선 대외원조 철학과 원칙에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측은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 수원국의 입장을 배려한 오퍼십 강조,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확대를 주요 철학으로 거론하였으며 수원국의 오퍼십 존중,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신뢰받는 외교추진’을 대외원조의 철학으로 발표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외교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겠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철학과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원조분절화에 대한 입장은 두 후보 측 공히 분절적인 현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했다. 하지만 그 대응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박 후보 측에서는 유-무상기관간의 통합을 제시할지 또는 무상원조 기관들 사이의 통합을 추진할지를 논의 중이며 자세한 것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문 후보 측은 유무상 원조기관의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1차로 분절적 구조를 정비하는 것을, 2차로는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무상 비율 및 구속 비구속성 비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비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박 후보 측에서는 유상 대 무상의 비율 수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 측에서는 2015년까지 무상 대 유상 비율을 6:4로 무상의 비중을 높이고 최빈국 및 중저소득국을 시작으로 유상원조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구속성 원조에 있어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문 후보 측은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의 전면폐지는 어렵지만 비구속성원조를 2015년까지 75%까지 달성하고 이후 10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에서는 무상에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유상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유상-구속성 원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ODA규모와 IATI가입에는 한 목소리, 취약국 및 빈곤국 지원에서는 입장 차이

ODA규모 확대와 원조투명성 부분에서는 두 후보 모두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두 후보 진영 모두 임기 내에 GNI대비 ODA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ODA의 양적 확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2017년까지는 OECD/DAC 평균치인 0.31%로 ODA를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원조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에 관해서도 두 후보 모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원조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부분에서는 두 후보측 모두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보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문 후보 측에서는 2017년까지 OECD DAC 평균수준(9.6%)으로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에서는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밝히며 시민사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시민사회 지원 예산의 간접비 비율을 8%로 증액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및 빈곤국 지원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우선 박근혜 후보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원조가 100% 인도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따른 원조를 하겠지만 취약국 및 빈곤국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문 후보 측에서는 OECD DAC에서 지정한 최빈국 48개국을 중점협력국 명단에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각 캠프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답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 global standard)' 이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양측 모두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에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여럿 있었으며, 게다가 이를 차후 인수위 단계에서 준비하겠다고 하여 다른 분야의 정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

<표 1> 제18대 대선 후보 별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교

항목	문재인 (민주통합당)	박근혜 (새누리당)
대외 원조 철학	①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 ② 수원국의 입장을 배려한 옹호심 강조 ③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확대	신뢰 받는 외교 추진
대외 원조 원칙	① 수원국의 옹호심 ②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③ 지속가능한 개발	
원조 분절화	분절화된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새로이 정비된 시스템으로 정책과 집행을 진행할 것. 5년 임기 내에 영국의 DFID와 같은 기구를 참조하여 독립적인 원조 전담기관 신설 검토하고, 동 기관에 ODA예산 및 인력, 정책수립 및 집행, 원조 추진 절차까지 통합된 ODA업무 수행하는 역할 부여방안 고려. 구체적인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예정임.	현재의 추진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무상을 통합할지 무상간의 통합을 추진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통합의 방향은 제시하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에서 해야 할 일임. 현 단계에서는 큰 방향만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무상 원조 비율	유무상 비율이 56:44로 현 정부에서 오히려 유상비율이 커진 상황을 중단시키고, 2015년까지 최소한 당초 목표인 무상 대 유상 비율을 60:4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체제정비와 동시에 최빈국 및 중저소득국에 대한 유상원조 폐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유상원조를 폐지시킬 것임.	무상원조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유상을 줄여서가 아니라 무상원조의 양을 증액시켜 달성. 유상 대 무상 비율을 선진국의 예를 따라 조절할 것임. 원조를 늘리는 데에 있어서 유상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함.
구속 ·비 구속성 비율	현실적으로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의 전면폐지는 어려워 보임. 2015년까지 비구속성원조의 비율을 75%(무상100%, 유상5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목표를 달성하고, 이후 100%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집권 후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임.	기본적으로 구속성을 줄여야 하며, 무상원조의 경우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함. 그러나 유상 부분의 비구속성이 제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함.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유상 안에서 구속성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갈 것임.
ODA 규모 확대	2015년까지 0.25%의 ODA규모 확대 목표달성과 동시에 유상원조와 구속성 비율을 대폭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원외교 수단으로 쓰이는 원조 예산이 아니라 진정한 공적개발원조의 목표인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순수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으로 사용할 것임. 2017년까지는 OECD/DAC 평균치인 0.31%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임.	차기정부에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GNI 0.25% 비율을 달성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것임.
투명성	IATI가입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옵서버 가입	IATI가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를 위한 준비가

	후 임기 전반기 정회원 가입을 추진할 것임. 빠른 시일 내에 IATI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증대되는 것이 예산규모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임. 국회의 원조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할 것임.	필요함. 원칙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국회의 모니터링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음.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쉽	2017년까지 OECD/DAC 평균수준(9.6%)으로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 확대할 것임.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NGO와 연계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NGO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시민사회 등 민간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지원을 활성화시켜 시민사회, 민간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이 ODA 정책입안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의 ODA 역량강화와 동시에 이뤄져야 함. 정부가 시민사회에 지원하는 예산의 간접비 비율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2015년까지 8%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원조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보강 지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대한 정책 메뉴가 있음.
취약국 및 빈곤국 지원	DAC 수원국 목록(149개)중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48개국을 중점협력국 선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저소득 이하 국가들과 취약국 및 분쟁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임.	현실적으로 원조가 100% 인도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함. 북유럽 선진국들 역시 국익이 바탕이 되는 원조를 집행함. 기본적으로 원조가 글로벌 규범을 따라, 격의 있게 해야 하지만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 밝히기 어려움.
기타 특이 사항	- 원조를 자원외교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공적개발원조의 목표인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예산 사용할 것임. - 원조 참여 기업의 활동규범 및 관리/감독 규정 마련	

자료출처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질의서에 대한 각 캠프별 답변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질의서에 대한 각 캠프별 답변문
《제18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발표 및 답변 내용
자료작성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장설아 간사

2. 시민사회가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한국ODA에 대한 제언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양 후보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은 '국제기준을 준수한다'는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상이하거나 양측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2 대선논평'을 통해서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ODA 정책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개발협력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포함한 위의 약속 사항들을 공약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ODA Watch도 의견서를 통해 "후보 모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다른 분야 공약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구상이 한국의 개발협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¹

이와 같은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구상과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바탕으로 KoFID는 차기 정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네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30여개의 유무상 원조기관을 통폐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원조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발협력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단순히 사업승인 및 보고의 역할에 그치는 등 유무상 원조의 원활한 조정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원조 수원국의 업무부담과 사업간 연계성 약화 등 다양한 약점을 갖고 있으므로, 원조기관의 통합과 조정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이다. 이번 토론회 및 질의응답에 문 후보 측은 원조 전담기구 설립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준비가 미흡했으며, 박 후보 측은 통합과 조정의 당위성까지만 언급했다. 향후 인수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된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둘째,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의 문제이다. 우선 양적 개선에 있어서는 양 후보 측 모두 현재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공약한 ODA/GNI 0.25%를 차기 정부에도 목표로 삼아 달성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간 가장 큰 시각 차를 보였던 부분은 원조의 질적 개선 문제였다. 특히 무상원조 비중 증가, 구속성 원조 축소에 대해서 두 후보 진영은 큰 이견을 보였다. 문 후보 측에서는 최빈국 및 중저소득국 중심으로 단계적 유상원조 폐지, 구속성 원조 폐지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반면, 박 후보 측은 비율은 줄이되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유상원조는 수원국에 이자와 원금상환의 부담을 지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사회는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율을 줄이자고 합의하고 이를 OECD DAC 권고안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원조 선진국들은 유상원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또한 비구속성 비율에 있어서도 파리선언이 권고한 바대로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늘리고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구속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박 후보 측

¹ 『제 18대 주요 대선후보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에 대한 ODA Watch의 의견서』 (2012.11.16, ODA Watch), 『2012 대선 논평 - 개발협력 약속사항 공약화하고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2012.11.14,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답변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부산 총회의 정신에 부합하는 원조를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 총회 이전에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2008)과 파리 선언(2005)에서는 구속성 원조와 유상 원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와 권고로 제기 되었으며, 한국 또한 OECD DAC 동료 검토(peer review)를 통해서 현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다.

셋째,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KoFID는 유력 대선 후보 모두 IATI(국제원조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을 공언한 것에 환영한다. 하지만 IATI에 가입하는 것으로 원조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원조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 강화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원조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비리에 사용되는 싹짓돈을 막을 길이 없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채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원조를 대가로 제공하고 정부가 해당 기업의 뒤를 봐준 사례는 투명하지 않은 원조 운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렇듯 제2, 제3의 카메룬 CNK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ODA관련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ODA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넷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자원외교 혹은 군사협력의 수단으로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개발협력 중점협력국 명단에는 최빈국과 함께 신흥 개도국, 자원을 많이 보유한 중저소득국 등이 나란히 포함되어 있다. 최빈국 중심의 원조가 아닌 경제협력과 자원외교를 위해 원조가 남용되는 것은 OECD DAC 및 UN의 권고안이 제시하는 원조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다자원조 중에는 UN평화유지군 분담금과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재건팀(PRT)의 기지 설치 및 운영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활동에 ODA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ODA의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이와 같은 원조를 지속한다면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을 명목으로 정치·군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대선 유력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에 대한 KoFID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최근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UN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 선출 등의 소식이 연일 '경사'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사'스러운 결정들 한편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미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차기 정부는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될 것이다.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의 대선 공약은 향후 5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줄 얼굴이자 국제사회가 한국을 평가할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한국ODA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제출한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 (2012.10.31)

I. 원조기관 통합
□ 30여개 원조 부처 및 무·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II.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 선진국들의 평균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 확대
□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 최빈국·취약국·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III.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IV.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주관/기획/감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회(ODA Watch/참여연대)
ODA Watch 윤지영 팀장
참여연대 이미현 간사

작성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사무국 전지은 간사

발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한국 시민사회 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KoFID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OECD DAC HLF-4)에 앞서 11월 26-28일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의 한국 조직위원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2층
Tel: 02-2279-1706 Fax: 02-2279-1719
Email: kofid21@gmail.com Web: www.kofid.org